

부동산 안정화 공감... 용적률엔 “500%” vs “300%” 대립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윤석열 재개발·재건축 공약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 나서
李, 4종 주거지역 신설 등 내세워
尹, 1기 신도시에 추가 주택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밝히며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만,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 등 6대 공약을, 윤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 상향해 일산·분당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추가 주택 공급 등 3대 공약을 밝혀 공약의 세부계획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공약처럼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500%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도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지만, 서울시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를 조례로 명시해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노후아파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6대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한 4

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앞서 6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절 및 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로서 이사 수요 조절 등 3대 공약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계시켜 주거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일산과 분당에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큰 혜택이 없는 재정비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과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윤석열표 국정운영, 분권형 책임장관제 실현

“문제 해결형 정부 만들 것”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드는 정부’,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정부’, ‘국민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를 만들겠다고 차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청와대 개혁·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제, 안전

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 퍼주기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플랫폼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화를 달성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추가로 ‘메타버스 정부’란 표현까지 쓰며 “여러 부처

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장관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토론에서 “인구문제라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출산장려 정책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학적으로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복지 정책 등으로만 대대론 것처럼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용의주도하게 대처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文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역사적

“시대적 과제, 중앙·지방 힘 모아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의 국정 참여 차원에서 국정 과제로 삼은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협력회의체로,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회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국무총리와 관계부처(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열렸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방안을 심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與,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

실수요자 지원방안 마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대출 상환을 낮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을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부담 완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실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대출 규모 증가와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관련 대출 실수요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어제(12일)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출규제인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에 예의를 뒤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에 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비율 100% 유지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보증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尹 “4월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한전의 적자·부채 책임 회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 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 상식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